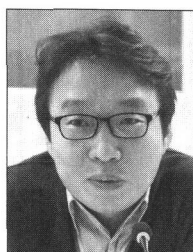


# 낙농산업선진화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 희 영**  
축산신문사 차장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이 또 다시 낙농업계의 화두로 급 부상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낙농산업선진화 대책’을 마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유업체는 유업체대로 불만의 목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산업의 특성상 현행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던 사안으로 이미 10년여 전부터 논의가 지속돼 오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정부는 3번째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 방안을 내놓았지만 또 다시 실무자협의회로 바통이 넘겨진 상태에 있다.

낙농산업선진화 대책 논의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9월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가 구성됐으며 실무대책반에서 초안을 마련해 2004년 2월 낙농진흥회의 집유업무를 직결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이후 직결전환과 기준원유량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협의회가 구성됐지만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에서는 중장기낙농발전시스템 마련과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4월 ‘중장기낙농산업발전대책’ 초안이 마련됐으며 여기에는 낙농조합 총량쿼터에 의한 직결전환, 원유거래방식을 시장 중심으로 개편 등을 담고 있었다. 정부 초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각 단체별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낙농발전대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오가며 정부 초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2005년 11월로 계획됐던 1단계로 충북지역을 직결전환 체제로 추진해 왔으나 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무산된 이후 그해 12월 낙농육우협회는 직결전환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수십 차례의 간담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했지만 결국 논의가 중단됐다. 논의가 중단된 것은 2007년 하반기부터 원유가격 인상 등 낙농업계가 원유가격 협상체제로 돌입함에 따른 것이었다.

원유가격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평시체제로 돌입한 낙농업계는 다시 낙농산업발전대책이 고개를 들고 논의가 재개됐다.

2009년 재개된 낙농산업발전대책 방안은 실무회의가 가동되는 것을 시작으로 또 다시 수십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을 2010년 3월에 발표했다. 2010년 대책에는 앞서 발표됐던 대책의 주요 골자였던 직결전환은 없어지고 전국쿼터제 구축, 중앙낙농기구 설립, 가공원료유 지원, 쿼터뱅크 운영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마련됐지만, 또 다시 낙농업계는 원유가격협상이라는 비상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논의는 잠정 중단되게 됐다.

2011년 8월 원유가격협상이 마무리 된 이후 정부는 다시 한 번 낙농산업발전대책 카드를 꺼내들고 논의를 재점화시켰다. 또 다시 실무협의회를 거친 낙농산업발전대책은 새해 들어와 ‘낙농산업선진화대책’ 방안이라고 간판을 바꿔 달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이후 농식품부는 낙농육우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서울우유, 각 유업체 별로 선진화 대책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각 이해 주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관련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우선 전국단위수급조절제와 관련해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유업체의 경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유일원화도 마찬가지로 생산자들은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유업체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앙낙농기구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입 등에 대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낙농선진화 대책과 관련 이해 주체 간에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낙농대책은 지난 10년간 무수한 논의를 거쳤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번번이 무산돼 왔다. 하지만 큰 틀의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와중에서도 결실을 맺은 부분도 있었다. 우선 2005년도 대책에 포함됐던 원유가격연동제와 세균수와 체세포수 패널티 강화 등이다. 원유가격연동제는 2013년 시행될 예정이며 세균수와 체

세포수 패널티 강화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같은 절차가 예상된다. 업계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낙농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결국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은 불가능할 것이다. 낙농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기간 내에 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수십 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낙농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전국단위수급조절제, 집유일원화, 중앙낙농기구 설립 등 하나하나가 낙농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다. 이 중 한 가지만 추진하더라도 낙농업계가 겪어야 할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물론 전국단위수급조절제, 집유일원화, 중앙낙농기구 설립 등이 모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어느 한 가지를 별개의 문제로 볼수도 없다는 것이 문제지만 그래도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우선 해결하는 해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생산자와 유업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우유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현재 대책의 초점은 기존의 생산량을 고려한 것으로 원유 생산량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소비량을 늘릴 수만 있다면 기존의 쿼터를 모두 인정하고 신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수출을 늘리는 것이다. 얼마 전 IDF서울컨퍼런스에 참석한 중국유제품공업협회 송쿤강 회장은 “중국은 우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며 그 우유가 뉴질랜드산이건 미국산이건 한국산이건 상관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는 715개의 유업체가 있으며 이중 60여개가 자국이 아닌 해외업체들이라는 것이 송 회장의 설명이다.

한·중FTA로 인해 농축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신선유 시장을 개척할 수만 있다면 현재 낙농업계가 걱정하고 있는 과잉생산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오히려 원유 부족을 걱정하게 되지 모른다. ☺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신선유 시장 개척 등의 우유소비확대방안 마련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